

추경 시급한데... 대답 없는 통합당

민주당, 내일 추경 처리 목표 통합당 찾아 국회 정상화 촉구 입장차 재확인...예결위원장만 원포인트 선출 시나리오 부상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3차 추경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26일 본회의의 처리 목표로 사실상 21대 원 구성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특히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국회 원 구성 문제와 관련, "여야가 좀 더 진지하게 협상해 달라"고 촉구했지만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날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국회 원 구성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으나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대표실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 "국회 정상화와 조속한 추경 처리를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여야 원 구성 협상은 추호영 원내대표에게 일임한 상태"라며 "주 원내대표가 복귀하는 대로 두 사

람이 알아서 논의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대변인은 "추경을 포함해 민생을 살피고 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그 절실함은 어느 당보다 우리 당이 크다"면서 "다만 오늘 만남은 일방적인 통보 이상은 아니었다. 원 구성 협상에 대해 대안을 준비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원 구성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의장실을 찾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은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밝혔다.

박 의장은 김 원내대표가 전날 강원도 사찰에 있는 미래통합당 추호영 원내대표

를 찾아가는 것에 대해 "잘한 일"이라면서 "국민의 뜻에 합당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다만 원 구성이나 추경 처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를 목표로 늦어도 26일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 등을 추가로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야 갈등 우려도 커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통합당 행동과 관계없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며 단독 선출 가능성도 시사했지만, 물밑에선 '11대7' 상임위원장 배분 원칙을 유지하며 마지막까지 미래통합당과의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남은 원 구성 중 가장 큰 고민은 예결위원장이다. 민주당이 유지하는 '11대7' 배분 원칙에 따르면 법사위는 민주당 몫, 예결위는 통합당 몫이기 때문이다. 추경이 통과되면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 단계를 건너뛸 수 있어도 예결위 본심사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KBS라디오에서 예결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우리는 끝까지 야당이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원칙이지만 추경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현 상황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만 원포인트 선출하는 방안이다. 예결위원장과 민주당 몫 나머지 상임위원장 5개 등 6개를 선출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이를 위해선 통합당이 자당 몫 예결위원장에 선출에 합의해야 한다. 합의가 불발된다면 민주당이 한시적으로 예결위원장을 맡았다가 나중에 통합당에 돌려주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박 의장이 동의해줘야 하는 부분이다.

다만, 극적으로 여야가 18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단독으로 선출하는 방안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추호영, 칩거 끝내고 복귀

통합당 원내대표 사의 9일만에... 입장 변화 없는 듯

미래통합당 추호영 원내대표가 잠행을 마치고 24일 복귀했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 임명 선출에 반발해 사의를 밝힌 지 9일만이다.

주 원내대표는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히 하나가 되고, 우리끼리뿐만 아니라 국민과 하나가 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강원도 고성 화암사로 자신을 찾아온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원구성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새로운 제안은 하나도 없었고 단순히 나라를 위해 계속 동참해달라고만 했다. 변화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가 귀경과 함께 추무공 정신을 강조한 것은 원구성 문제에 대한 '초심'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여의도를 떠난 다음날 그는 추무공 이순신 장군을 모신 사당인 충남 아산 현충사로 내려갔다.

현충사로 간 것에 대해 그는 "추무공이 12척의 배로 300척을 이긴 그 방법과 자세를 찾았자 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잠행 기간 전북 고창 선운사와 전남 장성 백양사와 구례 화엄사, 경남 남해 보리암, 하동 상계사와 칠불사, 경북 울진 불영사, 충북 보은 법주사, 강원 고성 화암사 등 전국의 9개 사찰을 방문했다. 하루 평균 1개 꼴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피해 옮겨다녔을 뿐 종교적 의미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잠행을 통해 불교계와 교분의 깊이를 유감없이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발승(마리를 낚지 않은 승려)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불심이 깊은 주 원내대표는 어린시절 집 근처 절 마당에서 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한 뒤 불교계와 오랜 인연을 쌓아왔다. 국회 불자 모임인 정각회 회장을 지냈고 현재 명예회장으로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낙연 "추경안 처리 뒤 전대 출마 거취 발표"

코로나 국난극복위 활동 보고 "목표 상당 수준 달성 기본소득 도입 논의 빠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활동 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는 다음 달 3일까지 추경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당권 도전 선언 시기는 7월 초가 될 것이 보인다.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우선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굉장히 광범위한 토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우리가 당장 대응할 문제가 많은

데 논쟁적 문제에 먼저 빠져드는 것은 지혜롭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기본소득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이제 시작된 단계이므로 당이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건 아직 조금 빠르다고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논쟁적 사안에 대한 접근 방법

과 관련, '오이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오이는 머리부터 먹으면 써서 못 먹지만 꼬리부터 먹으면 (쓰지 않아) 상당한 정도까지 먹을 수 있다"며 "서로 견해차가 별로 없는, 대부분이 당위성을 인정할만한 것들부터 시작하면 문제 해결이 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여의도 브리핑

김원이, 무자격자 불법 의료행위 처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은 2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 또는 면허 사항 외의 의료인에게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또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교육의 자주성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을 지방교육재정의 균형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명시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소병철, 농협손해보험 보상률 적정성 감사 요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의원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농협손해보험이 농해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받고 있는 보험 보상률을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며 보상률이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요구했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해 농어업재해보험 보상을 선정 오류처럼 이번에도 보상률이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며 "농어업재해보험은 농민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정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정책보험인 만큼 농민의 생

계를 지원하기 위한 현실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전반적인 감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책임지고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 후 감사원장은 소병철 의원에 7월에 농협손해보험부 감사 시 개선택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




















